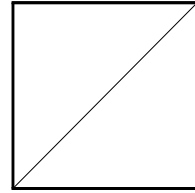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2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2. 21. (제 3 차)

의  
결  
사  
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2. 21.

## 1. 의결주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임승보 등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직무정지 3월 등으로 조치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2024년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2024.1.25.) 심의필
- 금융위원회 2024년 제3차 소위원회(2024.2.15.) 심의필

<별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기관경고

###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협회장 ○○○) 직무정지 3월

- 조치사유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별표2] 제2호, 제5호 및 제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

- (상근이사 □□□) 주의적 경고

- 조치사유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별표2] 제2호, 제5호 및 제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

○ (부부장 ◇◇◇) 주의

- 조치사유 :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

○ (前상근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조치사유 :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별표2] 제2호

## 2. 조치사유

### 가.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 ~ 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 (협회의 불응 이유)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범위가 「대부업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상황에 한정되므로, 법인카드 건별 사용 내역 등 내부경영 관련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

-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 ‘16.9.4. 협회가 검사대상기관에 편입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로 협회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검사 실시

#### <관련법규>

1.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2.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

### 나.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XX.☆☆. ~ 20▽▽.◇◇.□□.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 등 □□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건) 지연보고(♂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1.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

## 관계 법규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⑤ (생략)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⑤ (생략)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생략)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③ (생략)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6. (생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6) (생략)

다. (생략)

라. 삭 제

마. 삭 제

8. 삭 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

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이하 중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생략)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제재조치일 : 2024. 2.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3명)	직무정지 3월 1명,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직원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 ~ 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 '16.9.4. 협회가 검사대상기관에 편입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로 협회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검사 실시

#### <관련법규>

1.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2.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

### 나.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6.9.8.~2022.8.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5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1.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연 락 처	02-2100-2511	02-3145-8272